2007년 IT 수출 **1268억 달러 달성 목표**

정통부, 통신시장 지속적 규제 완화 추진…신규서비스 활성화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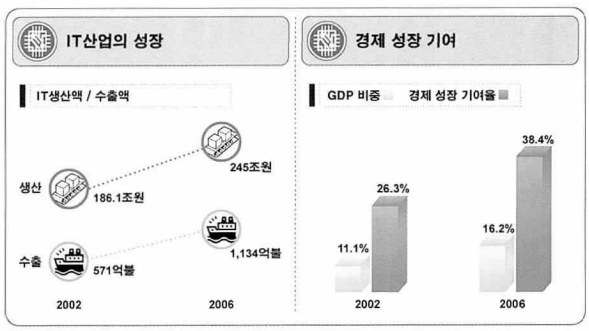
●○● 정보통신부는 올해 IT산업 생산이 작년보다 5.6%가 늘어난 259조 원, 수출은 11.8%가 늘어난 1268억 달러 이상을 달성, 올해 전체 수출목표 3600억 달러의 35%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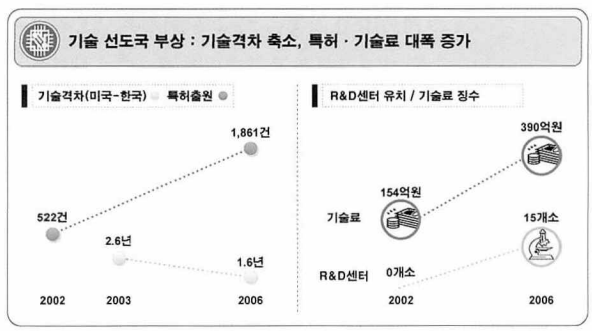
정통부 유영환 차관은 2월15일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올해부터 통신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서비스를 활성화해 통신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통신이용자 보호정책은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참여정부 4년간의 정책성과로 인터넷 이용 보편화, 국민다수의 고도화된 초고속인터넷 이용, 정보 양극화 현상 완화 및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꼽고, IT산업 수출이 지난 해 1100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도 중요한 성과였다고 소개했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와이브로, DMB는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참여정부 기간 동안 지속된 우정사업의 흑자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2002~2006년 기간 중 GDP에서 IT산업의 비중은 11.2%에서 16.2%로, 경제성장 기여율은 각 26.3%에서 38.4%로 대폭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장기 통신정책 1분기 확정

정통부는 작년부터 추진해온 통신정책 중장기 추진방향을 확정해 1분기에 발표, 시장에서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통신정책 중장기 추진방향에는 기간통신역무분류 개선안, 결합판매 허용 방안, 인터넷전화 활성화 방안 및 단말기보조금 일몰에 대비한 추가적 규제완화 방안이 포함돼 추진된다.

또,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영상통화가 가능한 WCDMA 서비스 지역을 올해 상반기에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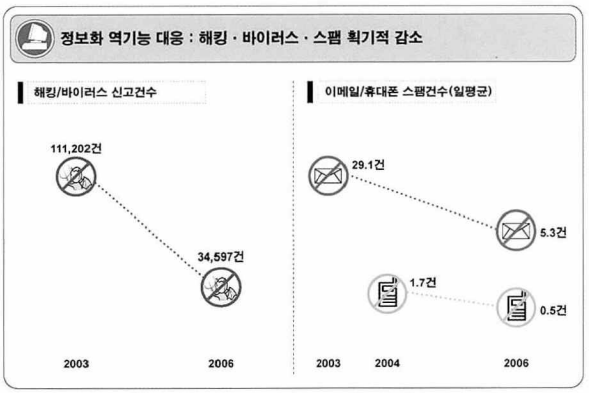
DMB서비스 사업자를 허가해 7월부터는 전국에서 DMB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범사회적 개인정보호호 체계 구축

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된다. 인터넷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기존 해지 희망일 3일 전에 본인이 해지 신청을 하도록 돼있는 약관을 개정해 올해부터는 본인 외에 대리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정통부는 상반기 안에 청소년의 휴대폰 요금 충전 시 부모동의를 의무화하고 청소년 전용 이동통신 가입계약서를 도입함으로써 청소년의 과다한 휴대폰 사용과 유해 콘텐츠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통부는 P2P사이트에 대한 노출 모니터링 실시로 불법 · 음성적인 개인정보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포털, 게임업체 등으로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i-PIN) 도입을 확대하고, 정보통신사업자 등이 사전에 개인정보 위험도를 분석 · 보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영향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 7월부터 부분 인터넷 실명제 도입

정통부는 오는 7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해 상임위원을 1명에서 5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심의단계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 이와 함께 모니터링 요원을 보강하고 최근 급증하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모바일 등 신 유형 매체에 대한 심의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통부는 올 7월부터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의 자율적인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한적 본인확인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또, 명예훼손 등 분쟁가능성이 있는 게시판 정보를 사업자 스스로 최대 30일 동안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 제도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인터넷에 노출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초고속인터넷업체, 포털 등 주요 개인정보 취급사업자의 관리실태 상시 점검과 대학입시 · 결혼정보 · 여행사 등 7대 취약분야에 대한 연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안전관리 · 소비생활분야에 첨단 IT기술 적극 활용

정통부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 요금감면 서비스에 올해는 초고속 인터넷을 새로 추가해 12만 명에게 약 155억 원의 감면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종전 월 소득 평가액 14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모든 저소득층으로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13만 명에게 103억 원의 추가적인 요금이 감면돼, 연인원 총 25만 명의 저소득층에게 258억 원의 유 · 무선 통신 및 인터넷 이용료가 감면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스쿨존을 시범 운영한다. 스쿨존에 차량속도 감지센서, 감

속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해 자동차 규정 속도 준수를 유도하고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통부는 경찰청 · 교육청과 협력해 전국의 교통사고 다발 스쿨존 5~10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 · 운영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스쿨존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정통부는 조류독감(AI), 구제역 등 가축질병 피해확산에 대해 RFID 등 첨단 IT 기술로 조기진단하고 대응하는 등 'u-농업' 사업을 농림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휴대폰에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탑재해 모바일결제가 가능한 기술을 개발, 시범서비스를 실시해 국민생활 편의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을 위해 u-IT기술을 활용한 지하매설물을 관리하는 서비스 표준모델을 개발해 지자체에 확산시키는 'u-City' 사업을 추진하고, 올 1분기 중 국방부가 선정한 시범부대를 대상으로 USN 기반의 무인 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병들의 경계근무 부담 완화 등 군 인력 운용 효율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 IT839 정책성과 조기 확산 주력

정통부는 와이브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4413억 원을 투자해 30Mbps급 3G 에볼루션(Evolution) 시스템, 휴대폰 내장형 모바일 RFID기술 등 그동안 추진해온 기술개발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국방통신망 와이브로 적용기술, 항공기용 임베디드SW 등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신규 과제를 착수해 미래사회에도 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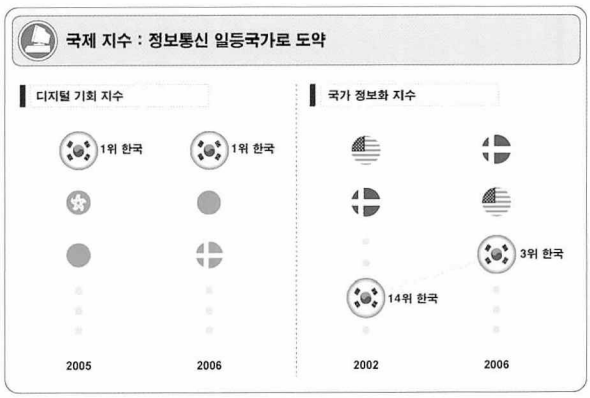
특히, 와이브로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러시아 등 와이브로 도입이 유력한 국가를 대상으로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캐나다, 남아공, 이탈리아, 인도에서 DMB 실험방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 관련 업계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방송의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해 상반기 중에 특별법을 마련, 국회에 제출해 국민이 조기에 고품질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정통부는 RFID산업 육성을 위해 제품의 개발에서부터 생산 전반을 지원하는 RFID · USN 종합지원 센터를 구축해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범용 리더기 설치 등 RFID 공통인프라 확충, 모바일 RFID 상용화 지원 등을 통해 RFID의 민간 확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네트워크 로봇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위치와 음성인식 기능을 향상시키고 콘텐츠를 다양화해 국민로봇 상용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웹 2.0 환경대비 IT산업 적극 육성



정보통신부는 IT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 경영 등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경련, IT중소벤처기업연합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벤처캐피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동대책반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정보제공 위주의 운영에서 전문가 파견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응용기술개발사업의 기술 담보 대출 비율을 확대하고, 150억 원 규모의 해외진출 특화펀드를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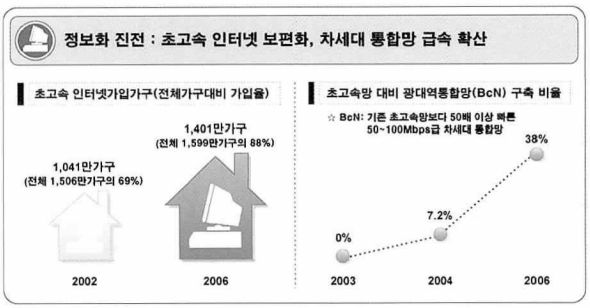
해 중국 등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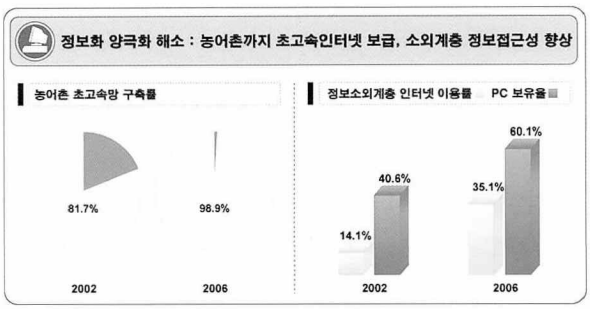
특히, 정통부는 '희망한국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IT의 역할을 제시하고 추진방안을 모색한 'ACE IT 전략'을 구체화해 웹 2.0 기술 · 표준 로드맵을 수립하고, UCC 활성화를 위한 오픈 API 개발을 지원해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초일류의 인터넷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네트워크 고도화 조기 추진

정통부는 올해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이 100% 완료돼 전 국민이 원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며 BcN(광대역 통합망) 가입 가구를 지난해 11월 기준 533만 가구에서 올해는 820만 가구로 확대해 IP-TV 등 HD급 멀티미디어 서비스 시대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말에는 제2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 및 이전을 완료해 SW산업의 허브가 될 누리꿈 스퀘어를 준공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정서비스 분야에서는 철도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7월까지 승차권 전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우편 IT업계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연간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펼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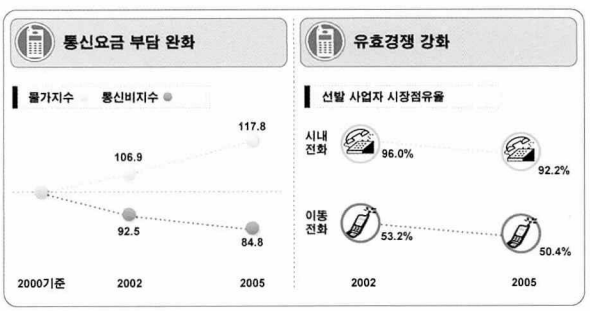


◆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조기 시행

정통부는 방통융합에 대응하기 위해 연초 국회에 제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상반기 중 IP-TV 상용서비스 실시를 위한 법제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통부 · 방송위 간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IP-TV 법제화를 조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IP-TV 서비스 활성화와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산 · 학 · 연 공동표준화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고 ITU 등 국제 표준화 논의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부는 IP-TV의 조기 상용화로 이용자에게는 더욱 다양화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콘텐츠 및 네트워크 · 단말 · 기기산업 전반에도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